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28호 / 4월 1일

중국정부 및 학계, 財政赤字 문제 논쟁 가열

1. 개요

-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중국의 금년도 재정지출이 전년비 12% 늘어난 2조 1,113억 元, 재정적자가 동 19% 증가한 3,098억 元으로 확정된 가운데,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음.
 - 중국정부는 내수 촉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, 일부 학자들은 정부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확대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.
- 한편,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내 공개적인 비판이 매우 드물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재정적자 논쟁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층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 - 주룽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공식적인 견해는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임.
- 실제로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(2.7%)과 채무잔액비율(16.3%)은 아직 IMF 권고치를 넘지 않고 있음.

2.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논쟁의 초점

1) 확대재정정책 실시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견해

□ 린즈위안(林志遠) 國家計劃委 經濟研究所 박사는 금년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00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국채상환 원리금을 재정지출 항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, 재정적자의 절대 규모를 문제삼기보다는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함.

- 또한 지금까지 재정지출은 주로 사회보장, SOC 건설, 공무원임금 인상 등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부연함.

□ 우정리엔(吳敬璉) 국무원발전연구중심(DRC) 교수는 연간 7%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과 같은 확대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, 재정적자의 GDP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체 경제의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함.

- 특히 명목상의 재정적자 이외에 잠재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함.

□ 로우지웨이(樓繼偉) 재정부 부부장은 최근 4년간 재정수입증가율이 14.2%에서 22.2%로 증가하였음을 상기시키고, 향후 재정수입의 GDP 비중이 개도국 평균인 25%, 선진국 평균이 40%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함

- 특히 중국의 재정수입 확대는 조세증가가 아닌 조세제도의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므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.

□ 한편, 샤오주오지(蕭灼基) 북경대 교수는 중국에는 도시지역의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대규모의 비등록 실업자 및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

조합.

2)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견해

- ☐ 쑹궈칭(宋國靑) 북경대 교수는 최근 4년 동안 재정적자가 60%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,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함.
 - 특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촉진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며, 경제성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함.
- ☐ 자강(賈康)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국부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, 내수경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되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.
- ☐ 중웨이(鐘偉) 북경사범대학 금융연구중심 주임은 국가 차원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,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냈으며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권을 부여하고,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스스로 재정건실화를 책임지도록 해야 함.
 - 현재의 경제성장은 지나치게 정부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민간투자가 둔화되고, 디플레이션의 해소에도 효과적이지 못함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☐ 재정적자 논쟁은 정부 재정정책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금후로도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.
 -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재정적자의 규모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중국과 같이 규모가 큰 국가에서 중앙정

부의 관리·감독만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.

○ 물론 금번 전인대에서 지방재정의 지출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되기는 했지만, 단시일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.

-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개선되거나,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음.

□ 그러나, 주룽지 총리가 지난 3월 28일 China Development Forum 폐막후 해외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, 이 문제를 둘러싼 중국내 공개적 논의는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임.(***)